연간 R&D비용 해외 로펌에… 글로벌 업체만 '어부지리'

SK-LG 분쟁

❷ 정부도 중재 나선 이유

산업통상자원부 양사간 회동 주선

기업 분쟁 장기화시 기술유출
경쟁사에 인재유출 가속화 우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오른쪽)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만남을 가졌다. /각사 제공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갈등이 두 그룹간의 갈등 및 소송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와 정부에까지 퍼지고 있다. 내부 갈등을 틈타 중국 등 경쟁사가 틈새를 파고드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간 회동을 주선했다.

정부가 사기업간 갈등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 관계자가 동석하지는 않았지만, 양사가 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뿐 아니라 정부도 양사 분쟁 장기화에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차전지가 반도체에 이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가장 가시적인 손해는 소송 비용이다. 업계는 양사가 소송 비용으로 매달 각각 50억원씩을 로펌 등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슷한 기업간 소송이 최종 판결까지 3년여 걸린다고 가정하면 각각 2000억원 가까운 돈을 해외 로펌 등에 사용하는 셈이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연간 R&D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LG화학의 연간 R&D 투자 비용인 1조원과 비교해도 20%에 달한다.

R&D 비용이 모두 이차전지에만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피해는 훨씬 클 전망이다.

뿐만 아니다. 글로벌 이차전지 업계가 최근 인력 쟁탈전을 시작하면서 양사가 인력 유출 시도에 속수 무책으로 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국내 인재에 가장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부터 중국 비야디가 공개적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한국 배터리 인력 채용 공고를 낸 데 이어, 중국 헝다신에너지차도 최근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 근무를 조건으로 8000여명 채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채용 조건은 숨겨놨지만, 국내 업체보다 2~3배 높은 연봉과 파격적인 복지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중국 CATL이 헤드헌터를 통해 기존 연봉의 3배를 제시하며 이직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중국뿐이 아니다. 폭스바겐과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키로 한 스웨덴 노스볼트도 최근 30여명 이상의 한국인과 일본인 기술자를 영입했음을 공식화했다. LG화학과 일본 파나소닉 등에서 자리를 옮겼다.

그럼에도 국내 업계는 해외 경쟁사 수준의 대우를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아직 이차전지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탓에 비판을 받을 소지가 커서다. 여기에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감당하면 인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 LG화학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이차전지 업계에 건전한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술 유출에 경각심을 퍼뜨려야 해외 경쟁사들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같은 이유로 '국익 훼손' 프레임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은 상태다. 앞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면 대화로 풀 수 있다며 공공연히 밝혀온 바, 이날 회동 후에도 산업부에 감사를 표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심대출 신청 폭주… 7200건·8000억

〈16일 오후 4시 기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5억까지 장기·고정금리로 변경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6일 오후 4시 기준 8000억원, 7200건이 신청됐다. 오전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주금공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선착순 접수가 아닌 만큼 오후 12시~3시 사이 혼잡 시간대를 피해 마감 기한인 이달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오후 4시 기준 8000억원, 7200건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는 4234억원, 3239건 신청 완료됐으며 14개 은행 창구 오프라인 접수는 4014억원 3983건 접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신청문의가 몰리며 다소 혼잡한 상황이나 은행창구는 비교적 혼잡이 크지 않다"며 "지역별로 일부 은행창구가 붐비고 있으나 전반적인 창구 혼잡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연 1%대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한도는 20조원으로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이날 오전 한때 홈페이지에 신청자가 1만명까지 몰리면서 접속까지 20~3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주금공은 먼저 신청한다고 달라질 게 없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금액이 20조원을 넘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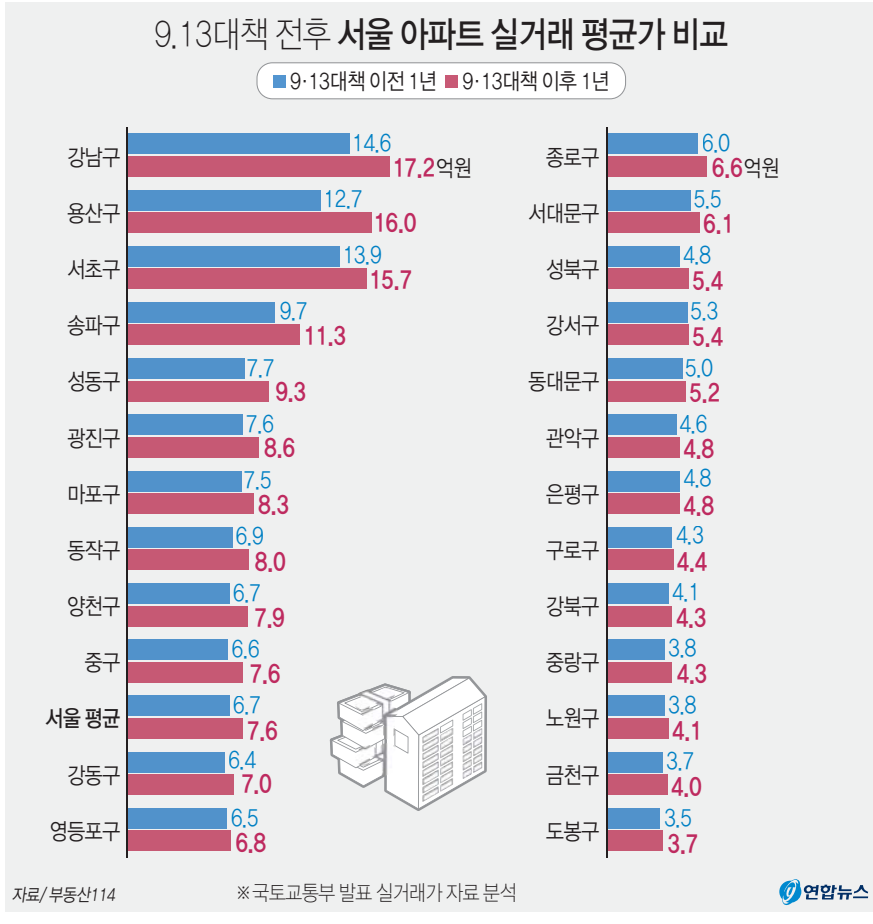
주금공 관계자는 "상품 출시일인 16일 현재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급증하는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를 피해 신청하거나 혼잡하지 않은 다른 날에 신청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4% 더 올랐다

9.13 부동산 대책 1년

강남보다 강북이 상대적으로 상승폭 커
실거래 1년전에 비해 56%가량 줄어



작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3대책을 전후해 강남보다 강북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6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13대책 이후 1년간 거래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평균 7억5814만원으로, 9·13대책 이전 1년 평균 실거래가(6억6603만원)보다 13.8% 상승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 건수(이달 5일 등록 기준)는 총 4만2564건으로 직전 1년간 공개 건수(9만7414건) 대비 무려 56% 가량 줄었는데, 실거래 평균가는 더 높아진 것이다.

이는 9·13대책 이후 대출 규제로 재건축·고가 등 인기 지역의 실거주와 투자를 겸한 아파트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9·13대책 이후 1년간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량(실거래가 공개 기준)은 9·13대책 이전에 비해 60.2% 감소한 것과 달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량은 37.6%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9·13대책 이전 17.3%에서 9·13대책 이후에는 24.7%로 높아졌다.

9·13대책 이후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일반 아파트는 하락폭이 미미했고, 지난 7월부터는 일부 신축·일반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면서 실제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9·13대책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1.13% 하락했지만 올해 7, 8월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9·13대책으로 거래가 침체한 상황에서 대출 부담이 덜한 무주택자, 대출이 필요없는 현금 부자들이 주로 주택 매수에 동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별로는 용산구의 실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 아파트의 최근 1년간 평균 실거래가격은 15억9724만원으로 직전 1년간 평균가(12억6727만원) 대비 26% 상승했다.

용산 미군부대 이전과 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 호재로 집값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어 성동구의 실거래가격이 9·13대책 이전 1년 평균 7억7033만원에서 최근 1년은 9억3264만원으로 21.1% 올랐다.

성동구 일대 재건축 사업과 서울숲 인근 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는 등 일명 '마용성'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컸다.

9·13 규제의 중심에 있는 강남구는 대책을 전후한 실거래가 상승률이 17.7%로 비강남 인기지역보다 낮았다. 다만 최근 1년간 실거래가 평균가는 17억1984만원으로 서울 25개 구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송파구의 평균 실거래가는 9억6706만원에서 11억3317만원으로 17.2% 상승하며 10억원대를 돌파했다. 서초구는 13억9053만원에서 15억6951만원으로 12.9% 상승했다.

/연합뉴스